

“인권도시 광주 폐지 안 돼” ... “교권 침해·학력 수준 하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충남·서울시 조례 폐지에 법정 다름 ... 광주시의회도 상정 교육계 “조례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 이루도록 보완 필요”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요건을 충족해 입법 절차에 들어서면서 조례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광주시가 '민주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존중하되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27일 운영위 수리 결정을 받으며 통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하반기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주민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지만 충남도는 법원이 충남도 교육청의 집행금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서울시의회 역시 조례를 폐지했지만 서울교육청이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한 결과 유효 청구인은 8207명으로, 동의 요건(투표권이 있는 시민 150분의1·8007명)을 충족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제정됐으며, 학생 인권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관할 학교와 교직원·학생·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실현 등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발의 후 1년 이내에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의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폐지안 발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폐지 찬반 논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오는 8월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는 만큼 교육문화위원들의 변경 역시 변수다. 현 교문위원들 대다수가 광주가 가진 인권의 상징성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 가결·부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심의의 요점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접수한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 결과로 최근 5년 광주에서만 교원 침해 사례가 291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상해·폭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2010년, 2011년 전국에서 1, 2위의 학력 수준을 자랑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사항으로 주민 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며 “또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발의됐지만 이후 집행 금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조례 폐지로 발생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사들은 조례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특정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책임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백성동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현시대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학생 인권이 교권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운영위 수리 결정에 따라 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되면 내년 9월 안에 해당 안을 다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효성 요건을 충족해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인권 도시’ 광주의 정서상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검사탄핵·채상병특검법 중단해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역시 추진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외요구권(거부

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

추안을 발의했다. 이날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을 이날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들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

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

습도 포착했다.

국민의힘에선 유 의원에 이어 당권주자 나경원 의원, 주진우 의원, 송석준 의원, 광구택 의원 등이 차례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위원을 위주로 발안자를 편성했다.

찬성토론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령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